

민주 “무자비 사법사냥” 국힘 “구속 사유 넘친다”

이재명 표결 앞두고 공방 치열
야 “군사보다 악랄한 검사독재”
여 “이 대표, 스스로 뗏뗏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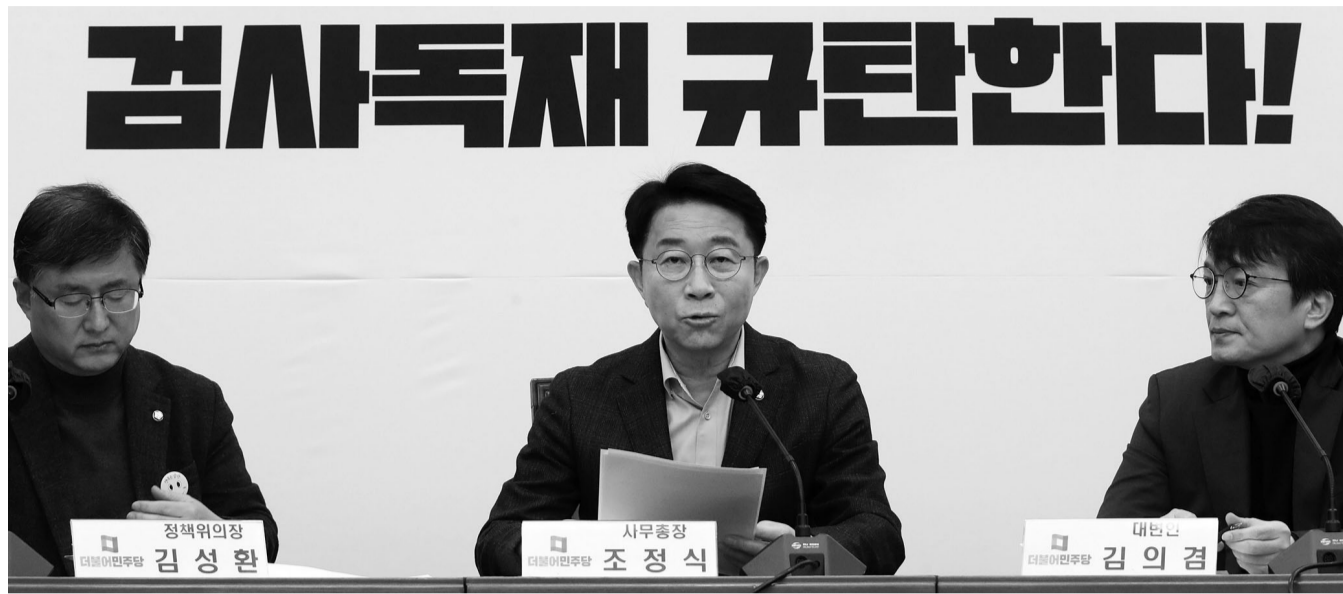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보다 악랄한 검사독재”라고 정부를 맹비난 하는가하면, 국민의힘은 “범죄 사안에 관해 해명하고 정당하게 사법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이 총,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폭력을 일삼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 응원할 것이며 단호,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용여부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 직무 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지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대표의 경우엔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 정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던 방향의 설명으로 읽힌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또한 사실관계, 정치 탄압 측면에서 예외 규정 적용 소지를 살펴봐야 한 단식의 언급이 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 후 고강도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결 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

라며 “먼저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입장과 달리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취지의 비판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가서는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이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며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아직 ‘김명수 법원’ 아닌가. 법원 출석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뗏뗏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뗏뗏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부결시 ‘3월 임시국회’의 여론 비난 가능성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월1일에 열자고 하는데, 3월1일 개회는 제헌국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회기중에는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3월1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자 김미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3월1일까지 이 대표 방탄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3·1절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능멸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천하람 “輿 핵심 당직자, 호남 등 혐지 출마하라”

혐지 출마 대상자 명단 공개
“혜택받은 인재들, 전진배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6일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의 수도권·호남 혐지 출마를 요구하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친윤계 핵심 권성동·이철규·윤한홍 의원 등 혐지출마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나경원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을 출마를 요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천권 개혁 방향 제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당직을 맡았던 비수도권, 비례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호남권 지역구 중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구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었던 수도권, 호남

권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국민의힘을 혜택과 권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가는 보수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한 최고위, 원내지도부 및 그에 준하는 비대위와 당무집행기구 핵심 당직자에게 그 권한에 비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당직을 맡았던 비수도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앞으로 전진배치 시키겠다”며 “수도권과 호남권에 출마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무조건 공천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배치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총선 승리” 민주 시·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당 조직력 규합·尹 정권 규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024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여성위 발대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당 위원장, 임선숙 최고위원,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임미란 시당 여성위원장,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역 여성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민주말살’을 외치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이제는 여성이 한다’는 슬로건을 걸며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들은 여성 인권 신장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미란 위원장은 “여성 당원 스스로가

실력을 쌓고 노력해 당당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어머니도 강하고 여성은 더 강한 진정한 여성 시대를, 시당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민주당 전남도당도 화순하니움 문화센터에서 여성위 발대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외쳤다.

발대식에는 신정훈 도당 위원장, 임선숙 최고위원,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김화신 도당 여성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역 여성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도당 여성위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윤정권의 검사 독재를 규탄했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 ‘정치를 바꾸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최황자·김혜나 기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인사검증 부실 논란

아들 학폭 연루... 하루만에 사퇴
“법무장관 인사검증 책임물어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전력 문제가 드러나며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들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하고있다.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

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임명 하루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임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 사표 수리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사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의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임명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없이 강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검증은 입시 부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같이 자녀의 세평과 관련된 내용은 검증 대상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구조라고 해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양곡관리법’ 수정... 오늘 통과 여부 주목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한 수정안
민주 “반드시 처리하겠다” 각오
輿 “정부 재정부담 가중” 입장

전남도의 주요 현안 법률 중 하나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할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 쌀 매입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무조건 반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세우며 협치를 내팽개쳤다”며 “현실적인 대안과 근본적인 해법 없이 무조건 반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 폐쇄기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정부가 초과 생산될 쌀의 시장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쌀 시장 격리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황자 기자·뉴스